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4.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상정된 안건

4.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2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2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

(16시29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안과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청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최유리 외 52,3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7)

(16시3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장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장겸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헌법 및 방송법 등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고려하고 현재 방송의 공정성 위반 등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 심의 및 제재 등의 절차가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경영진과 대주주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 취지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6시33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들 법률안을 의결하

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에 들어가야 될 순서이나 이 안건에 대하여 안전조정위원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위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소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최형두 위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요구가 접수된 안건은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며 안전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정위원회는 안전조정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조정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양 간사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으시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리고 안전조정위원회 이유에 대해서 2분 정도만 발언 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2분, 2분 드릴게요.

○최형두 위원 3명을……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이 의사를 밝히셨어요.

○최형두 위원 이해민 위원, 참석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여기는 2명 해야 돼요.

○최형두 위원 아니, 제1교섭단체니까……

이해민 위원님, 제2교섭단체가 제1교섭단체랑 동등하게 좀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최형두 위원 우리가 3인으로 구성하게 해 달라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해민 위원님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형두 위원 우선 지금 소위 위원장께서 발표하셨지만 우리 소위 심도 깊은 축조심의를 하면서, 이 논의를 좀 더 심도 깊게 하자고 저희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의 경우에도 또 실제로 지금 미디어학회들의 여러 요청에 따라 보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위인폐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인설관이 아니라,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방송학회 등에서, 언론학회 등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듯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정말 포괄적으로 심도 깊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미디어 특위를 만들고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개의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함께 여야 특위를 만들자, 정부 내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 하나…… 그리고 지금 업무 조정의 폭도 당초 미디어학회의 요구라든가 이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협의할 뿐 아니라 사실은 일부 부처의 일부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치지 말고 이번에 미디어 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전체를 보다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우선 상임위에서 안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라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꼭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보이콧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 논의할 때도 중간에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남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 3법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위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고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래도 정부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시 야당은 뒷받침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의해서 잘못된 방송장악을 바로잡는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과 함께 복잡한 미디어 시장의, 글로벌과 국내 시장의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지금보다 더 늦으면 안 되고요—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방송 3법을 처리하고 그리고 산적한 미디어산업계 생태계의 문제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협

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이미 밝힌 대로 미디어발전위원회 혹은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 구성되고 포괄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 콘텐츠 진흥을 비롯한 종합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 심사 요구가 들어온 안전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위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소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안전조정위로 회부합니다.

안전조정위원들께서는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안전 심사 이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전의 경과보고를 듣고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소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안전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안전조정위원회 심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김현** 안전조정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안전조정위원회는 9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회부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9월 9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몇 분 해요?

○위원장 최민희 5분.

○박정훈 위원 오늘 이 상임위가 있기까지 상임위를 여네, 안 여네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저희하고 협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했다가 말았다가 정했다 말았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를 열었는데 저희가 안전조정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전조정위라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 달라도 최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3 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 안전조정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위원을 안전조정위에 넣음으로써, 야당 몫으로 넣음으로써 그래서 4 대 2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 30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이것을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법은요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병합심사를 요청하는 민주당 위원이 있었지만 소위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묵살하면서 사실상 당 내 민주당의 절차조차도 지키지 못한 그런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김현 소위원장께서 법안의 병합심사를 요청한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련 업계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가 크게 달려 있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지만 저희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을 바라보는 통합 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상임위의 모습이 그런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지 민주당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영 위원이 안전조정위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 하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까지 만들어도 우리는 문제될 것 없어,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뭔데? 이런 태도를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진짜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독재를 한다면 민주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해당 국무위원 격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나와 계시지만 면전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 웃으면서, 희희덕거리면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고 국민들

이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다가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KT 관련해서 할 내용이었어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소위에서 병합심사하자 그랬는데 제가 법안 발의를 좀 늦게 했어요. 그리고 제 법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 3개의 콘텐츠 기능을 합쳐서 독임제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게 쉽게 금방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기 전에는 부처의 조율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나중에 뭐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구. 그런데 저는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같이 좀 병합해서 했으면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제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입법조사처에서도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 먹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고 다른 부처와의 관계, 정부조직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의의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발의를 5월 26일인가 상당히 늦게 해 갖고 병합이 안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방송 3법이라는 큰 틀이 해결이 돼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콘텐츠 진흥인데 요즘 케데헌 얘기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그런 독임제 부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5분.

○이해민 **위원** 안전조정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다시 한번 신상발언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지금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요. 박정훈 위원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의 발언은 저의 정말 깊은 고민과 의사결정을 매우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동료 위원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언행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최형두 감사님께서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소환하시는 비교섭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위원님도 비교섭이지요.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저에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뒤늦게 결정을 하는 것과 우선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빠른 행동을 하는 것 그 두 가지 옵션에 대한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의 소위 회의를 거쳤고, 법안소위를 거쳤고 공청회를 계속 거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지금은 언론개혁의 시간이라는 지점에 다다랐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민들의 방송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개혁, 거기에 대한 열망을 보면 저의 결론이 맞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원인에는 지난 국민의힘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더욱 완결성을 갖춰 나가는 언론개혁의 길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 길에 저 또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두 분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훈기 위원님 법안, 제가 숙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반드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체부 의견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단계 방송·통신 영역 정상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박근혜 때 망쳐진 방송·통신 정책을 일원화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비교집단체 몫 야당으로서 안전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이해민 위원과 조국혁신당 위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뭐가 예의가 아니에요? 안전조정위가 무력화된 게 그것 때문인데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의가 아닙니다! 이해민 위원이 안전조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저렇게 소리까지 지르는 것은 지금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김현 위원 다섯 번째예요.

○최형두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상발언한 것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5분입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기부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 TV지오—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정책과랄지 방송진흥기획과, 디지털방송정책과 관리들의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상임 3명 비상임 4명, 제가 굳이 개편안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새로 추가되는 분야가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 홈쇼핑 PP, 일반 P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선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서 신설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 수도—위원 정수지요—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상임 5명에서 7인으로 개편해서 공영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를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어요. 그중에 방송 미디어 통신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써서 발전을 시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표되니까 다음 날 기자회견 했나 봐요. ‘정무직 위원장은 본인 하나뿐이고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다. 법까지 바꿔 사람 자르는 건 숙청이다’. 사실상 법적 대응까지 얘기했어요.

배경훈 장관, 이 발언에 동의합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는 참 답답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하고. 국민들이 그리 원하는 77년 만의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이라는 정무직, 그것도 온갖 비리와 여러 가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저는 좀 과대망상 같아요. 왜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도는 겁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수사 있는 것 잘 받으시고,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는 감사원 주의 처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고위공직자라면 이 정도 상황 오면 알아서 물러납니다—국민들이 선택한 국민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일할 수 있도록—그게 정상이지. 지금 많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러 가지 기능과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분산되고 합쳐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송 미디어 통신을 새롭게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잘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왜 본인 거취와 연결합니까?

이런 배경에는 아무리 봐도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야당이 됐지만 국민의힘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감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이전에 우리 젊을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민주주의의 말이었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대한민국이 동물국회에서 숙의국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당의 전신이 다수당일 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국회법을 바꾸어서 만들었던 선진적 체제입니다. 안전조정위원회, 다수당과 소수당이 3 대 3 동수로 해서 90일까지 숙의하고 그래서도 결론을 못 내면 3 대 3분의 2 표결로 안전조정위원회를 종결하고 다수결로 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비교섭단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비교섭단체를 의무적으로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무소속까지도 막 이렇게 넣습니다, 3 대 3 동수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당시에 김진표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하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동물국회 부끄러워서 협치하자고, 숙의하자고. 그런데 21대 국회 이후로 모든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그나마 국회 선진화의 마지막 기동조차 허물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또 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비교섭단체를 의무적으로 1명을 넣으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 당요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록 의석수는 107석, 108석밖에 안 되지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의 득표율 격차가 5%p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 물론 우리 당이 잘못해서 대패한 것이지요. 소선거구제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107석이나 됩니다. 교섭단체끼리……

그리고 이 쟁점 자체가 비교섭단체에는 쟁점이 없었습니다. 1교섭단체와 2교섭단체 간에 첨예한 쟁점이 있었고 특히나 그것도 미디어 방송 통신의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진보적 학회, 진보적 언론조차도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정말 근본적인 미디어 거버넌스를 선진화시키자, 그래서 케데헌의 눈물을 정말 케데헌의 기쁨으로 다시 바꾸자. 이런 모든 케이팝, K-컬처의 맹아와 싹은 우리 방송사들이 다 키우고 우리 콘텐츠산업이 키우는데 왜 이 과실은 외국 회사들이 다 가져갑니까? 이게 뭔가 미디어 통신 방송 거버넌스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진흥과 규제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국력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방송·통신 체제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숙고해서 하자는 것이고, 안건조정위원회 9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 방송 3법 입법 이게 시행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임명하면 됩니다. 추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뭇 1명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송 3법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길어야 6개월, 시한 정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됩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만들 때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렇게 큰 법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체제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후속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그대로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에서만, 방송통신위원회 직책 모두 다 승계하는데 단 한 사람 정무직만 배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것 때문에 처분적 입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격적 모독 그만하십시오, 이제.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국회는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미디어·방송·통신 체제의 개편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그놈의 방송통신위원 추천권. 7개월 7일 동안 임명 못 받고……

○최형두 위원 빨리빨리 하십시오, 이제.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본인은 그런 얘기 하시고, 7개월 7일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할 때 그 때 좀 그 말 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성범 위원 개인적인 사연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김현 위원 제가 발언할 차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겨운 현장인데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지막지한 방송장악에 맞서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 중입니다.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법까지 왜곡해서 말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모두를 위하여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의 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라고 합니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전혀 문제 없고 합법적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규 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사표가 7월 1일 날 수리가 안 됐으면 정무직공무원 중에 한 명이 더 포함돼서 사표 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1인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이 졸속 처리되고 있지 않고 한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4월 25일 날 법을 발의했고 저는 대선 기간

중에 각 계의 의견을 모아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제정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7월 24일 날 있었고 8월 19일도 있었습니다. 1차 법안소위가 8월 27일 날 있었고 공청회가 9월 5일 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법안소위를 진행했고 그리고 전체회의를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대중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진숙 위원장께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본 바 있습니다. 열다섯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KBS에서 1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보니까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사장, 즉 박민 사장 때보다도 더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제 위치에 놓는 점. 그다음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에게 의해서 자행된 7월 31일 KBS 이사 날치기 처리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날치기 처리,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다음에 KOBACO 사장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튿날, 7월 31일 날 취임하고 8월 1일이 아니라 8월 2일 날 탄핵을 발의해서 임기가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유튜브에 네 차례 출연하고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수의 여전사로 스스로 등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에 공적 책임을 지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8월 1일 날 한 행위 그다음에 1월 23일 이후에 방통위를 형해화시키고 좌지우지하고 방송사를 장악했던 이 점 때문에라도 하루속히 빠른 변화를 꾀하는 방송시장에, 미디어시장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케데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장악을 하고 방송 종사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방송 통신의 정상화와 박근혜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중에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전부 반대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최민희**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와 제79조의2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가입자 식별정보의 유출 정황이 확인된 피해자만 5500여 명에 이릅니다. SKT 해킹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KT 측의 초동 대응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8일 소액결제 피해 발생 경로가 불법 기지국임을 이미 확인했지만 다음 날인 9일 오후 본 의원실 보고에서는 해당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T는 당시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사 결과 확실한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곧바로 당일 저녁 불법 기지국이 원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고 진상을 확인하려는 국회에는 허위로 보고해 놓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은 기사를 통해서야 공개하는 이 행태가 합당한 일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KT가 고객 피해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증거입니다. SKT 사태의 교훈을 잊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 실질적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속·정확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KT의 귀책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KT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SKT 해킹 사태와 이번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계기로 거대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기간통신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통신안보 문제에 대한 재점검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 KT를 상대로 한 청문회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황정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 배경훈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기간통신망 해킹이 발생하고 KT 그리고 LG유플러스의 데이터가 털리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통신사들이 삼중, 사중의 보안을 자랑하더니만 정작 치즈보다도 더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상 시그널이 처음 발생했을 때 조치를 했었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 완전히 안일한 통신사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안 참사, 보안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스미싱 피해라고 단순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보안 참사라고 봐도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보안의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게다가 지금 KT 사태에 기간통신망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보안 몰락의 날로 기억될 수준인데 KT는 무슨 뒷배를 믿고 축소 은폐하고 있는지 참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니깐 어차피 이용자들은 자기들한테 올 거다라는 것인지, 과기부는 국민 눈치를 봐야 할 상황에 오히려 통신사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

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더니 개보위가 조사를 개시하고 나자마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면 뭘니까?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악어의 눈물, 가식의 극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KT는 9월 1일 날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이미 경찰이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뚫릴 수가 없다’라면서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9월 3일을 전후해서 2차로 수천 건의 무더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KT는 수일이 지난 8일이 되어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미 1일에 경찰한테 정보를 제공받고 4일부터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KT의 8일 신고서에는 사고발생 시간 모른다, 피해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 없었다고 명시했다는 겁니다. 누장 신고로 24시간 내 신고해야 될 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그리고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까지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놓고 9일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KT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과기부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 지금 하나하나가 거의 게이트급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KT가 우롱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사전에 계속해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사실 9월 8일 KISA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속히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든 빠르게 초동 대응을 했었어야 됐다는 점에서, 저희가 대응이 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뿐만이 아닌데, 통신사들이 모두 법과 규정을 정말 우습게 알고 있는데 8월 22일 프랙(Phrack) 보고서 관련으로 KISA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데이터 유출 내역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고지한 사안이 있어요, 침해 사고 정황이 있으니 침해 사고 신고를 진행하라.

그런데 지금 프랙 보고서 관련 신고했습니까? 신고는커녕 오히려 침해 정황이 없다면 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축소 은폐가 아니면 뭘니까? KISA의 공식적인 고지가 통신사들이 깔고 뭉갤 수 있는 악성 민원입니까? 답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KISA에서 8월 22일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꾸려진 합동조사단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황정아 위원 과기부가 미온적이니까 지금 KT가 기간통신망이 털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배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수사 이후 이용약관만 들여다보겠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했어요. 게다가 KISA에 신고한 8일에는 배상약관을 바꿨습니다, 스리슬쩍.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안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부적절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김영섭 CEO를 직접 면담했고 관련된 피해 그리고 위약금 면제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기간통신망이 털린 사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SKT보다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뜨렸는데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적·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과기부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입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출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어차피 현안질의 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KT 질의해 주셨는데 KT는 좀 이따 하고 지금 SKT, 방통위 분쟁조정 위지만 저번에 거기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라 그랬는데 수용 못 하겠다고 했어요, SKT에서. 그런데 이용약관 귀책사유는 그때 과기부에서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귀책사유 인정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을 안 하겠다는데 과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것은 저희 과기정통부보다 방통위 판단사항입니다.

○**이훈기 위원** 거기서 판단을 했는데 이용약관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판단을 해 주셨던 사안이니까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같은 사안……

그리고 그때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7월 4일인가에서 14일까지만 면제해 주는 거였는데 저도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수용을 못 하겠다고 SKT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SKT는 개인정보 해킹 사태 때문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KT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SKT는 피해가 확인된 게 사실 없었어요, 우려가 상당히 컸지만. 그런데 KT는 지금 벌써 정보 유출만 5561건이고 그리고 소액결제가 나간 게 수백 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저는 과기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이 8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발생했는데 9월 1일 날 경찰이 먼저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KT에 알려 줬어요, 사건이 나고 며칠 있다. 그런데 KT는 첫 반응이 9월 5일에 나왔어요. 소액결제 시도도 그제서야 차단을 했는데 4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4일 동안 이게 범행에 노출되게 더 방치를 했고.

여기서 저는 도대체 KT가 고객들의 주머니가 이렇게 털리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이 일어났는데 이 해킹을 몰랐다는 게 첫째로 놀랍고, 두 번째는 KT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알려 줬다는 게 더 놀랍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치를 나흘이 지난 다음에 했다 이게 더 놀랍고, 그 후 KISA에 또 사흘 후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KT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 빨리 과기부에서 수사…… 지금 해킹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증거인멸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에서 빨리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KT의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경찰청과 저희가 협력해서, 경찰청은 수사를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통신 3사가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인프라를 활용해 갖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렇게 보안에도 무방비고 어떤 사고가 나도 대처도 못 하고 이런 상태라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기부에서 엄중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영이 아닌 공영의 어떤 통신사를 만들든가 아니면 제4통신사를 만들든가 해서 뭔가 자극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현실에 안주해서 이 3개 통신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국민이나 가입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KT가 과징금을…… 제가 법안을 다시 냈어요. 매출액의 3%인 과징금을 4%까지 늘리고 큰 사고가 나면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SKT한테 부과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1%밖에 안 돼요, 원래 3%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KT 사태 지금 점점 커지는데 과기부에서 엄중하고, 아까 얘기한 수사 의뢰도 하고 빨리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분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훈기 위원님 질의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 부과 이외에 KT의 책임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범인을 찾는 데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경찰에서는 이 범인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어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고 KT의 어떤 느슨한 대응 또 사건이 터진 이후에 증거인멸의 그런 정황들이 보이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거지요, 과기부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저희가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일단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이 사건의 굉장한 우려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털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IMSI 정보만으로는 직접 피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SKT 사건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답변도 그렇게 하였고.

그런데 소액결제를 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이런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건이 지금 수백 건이에요. 그러면 그냥 IMSI 정보가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정보를 해커가, 이 범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게 추정됩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해커가 어떤 경로로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까? 전혀 못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지금 조사 방향을 잡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SKT랑 다른 게 또 하나가 IMSI가 SKT는 통신사가 털린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 건은 고객의 휴대폰이 털린 거예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이것은 가정입니다만—SKT의 해커, 이미 SKT 고객의 IMSI 정보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해커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의 정보를 추가로 획득하면 SKT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게 가설을 세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저희가 조사하고 그 부분은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뭔가, 이게 만약에 범죄집단 이라면 이 방식 저 방식을 해 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극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SKT의 해커와 KT의 해커가 동일인이고, 동일 집단이고 그들이 지금 고객정보 또 이름, 성명, 전화번호하고 IMSI를 합치고 있는 과정이라면 무시무시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문의한이어서 우려가 과한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 조사에만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SKT·LG유플러스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불법 기지국이 탐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조사를 SKT·유플러스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통신 3사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의견에 더해서요 기간통신사 통신망에 대한 종합 점검 차원의 청문회로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국감이라서 언제 청문회 시기를 잡을 수 있을지 간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아까 제 질의에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장관님, 방금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KT 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대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모든 국민의 어떤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위약금 면제까지 약속을 받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약속 받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고 1일 상황을 인지해 놓고 손 놓은 KT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로 축소 은폐한 시도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늘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KT는 서버 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확실하게 발본색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제도적인 구멍이 매우 많은데 구멍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금방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내고 또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가리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반드시 세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노종면 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저희도 청문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의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그리고 징벌적 피해 배상을 도입해서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이런 고민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실 신고를 받아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의 법, 방법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관련 사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산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창조경제로 인한 미창부 때문에 왜곡된 방송통신 규제·진흥 체계를 12년 만에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큼니다.

또한 이 법이 방송 3법과 연계되어 윤석열 방송장악에 신음하던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방송 독립의 희망을 완성해 주는 법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윤석열 방송장악으로 잘못된 부분들, 박근혜의 잘못된 창조경제로 인하여 왜곡된 방송통신 규제·진흥을 바로잡는 1단계 작업입니다. 저희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하여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여는 2차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방위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게 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를 기반으로 재구조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유능하고 애국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열정으로 다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명칭이 어떻게든 새로운 기구가 뜨면 과기부도 또 앞으로 생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논의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겸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사, 경위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명단

위원명	교섭단체
김우영 ◎김 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3)
박정훈 최형두	국민의힘(2)
이해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조정위원장임

○출석 위원(18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청가 위원(2인)

이준석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영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5)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5건 9월 4일 회부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9)

이상 2건 9월 8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이상 2건 9월 9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8)

이상 2건 9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9.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0)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 9. 3. 정부 제출)

9월 4일 송부됨